

# 수능으로 줄 세우기 보단 건대, 꿈·끼로 ‘바른 입시’

고교생 ‘KU전공체험’ 행사 등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진행  
연간 1000여 명씩 9410명 참가  
진로·체험에 학생들 호응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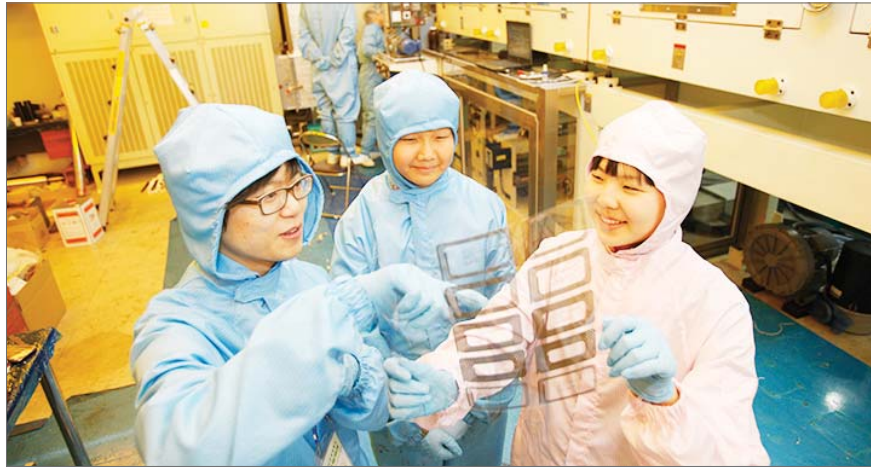
건국대학교가 대학입시가 수시모집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심으로 확대되는데 발맞춰 일선 고교 현장의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선다.

4일 건국대에 따르면, 건국대는 올해 고교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체험 기회와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6가지 주요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중심의 줄세우기가 아니라 학생들의 꿈과 끼를 개발하고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바른 입시’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일선 고교와 연계해 공교육 현장 의견을 입시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고, 도서벽지 등 상대적 교육정보 소외지역에도 상세한 입시 전형정보를 제공해 다양한 진학과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건국대의 대표적인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학생 1000여명을 캠퍼스로 초청해 진행하는 ‘KU전공체험’ 행사다. 고교생들이 대학 전공을 미리 체험해보고 대학 진학과 진로 탐색 기회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지금까지 총 9410명이 참여했다. 전국 고교별 학생을 추천받아 학생들의 지원동기를 평가, 전공별 40명~100명을 선발해 전공체험과 특강, 선배와의 대화, 입학전형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건국대 관계자는 “KU전공체험에서는 고교생들에게 해당 전공에 관한 자료집을 별도 제작해 제공하고, 대학에



건국대의 대표적인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인 ‘KU전공체험’에 참가한 고교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1년부터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지금까지 총 9410명이 참여했다. /건국대학교

서 배우는 전공 학문의 학습 내용과 졸업 후 진로까지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흥미로운 내용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며 “관련 재료비와 식사비 등 모든 비용은 무료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건국대는 올해 3월부터는 고교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고 교사들의 학생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KU꿈잡이노트’와 대학 전공이나 졸업 후 진로를 담은 ‘KU전공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추후 노트 활용 사례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7월에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안내와 합격사례 등을 담은 ‘KU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KU논술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국 고교에 배포하고, 7월 한달 간 전국 고교생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KU모의논술’을 온라인으로 실시해, 건국대 논술의 출제의도와 해설, 모범답안을 공개하는 등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입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KU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은 건국대가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6개 대학과 함

께 연구해 개발한 책자 ‘학생부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 어렵게 느껴지는 학종 전형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는 학종전형 제도와 정책 일반, 서류평가 요소, 서류평가 자료, 면접, 전형결과 등으로 구성되고, 이들 대학 입학홈페이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대입정보포털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고교 교사와 교장·교감 등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직원들과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는 6월~7월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교사 연수를 시작으로 내년 1월 교사 대상 학생부종합전형 특강 등으로 진행되는 ‘KU꿈잡이노트 활용 컨퍼런스’, 교장·교감 대상 ‘KU컨퍼런스’가 이어진다.

교사 연수에서는 건국대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실제 서류를 대상으로 건국대 학종 전형의 평가지표대로 모의서류평가도 진행된다. 모의서류평가 이후에는 테이블에서 교사와 입학사정관이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예비군의 날’ 행사에 예비군은 조연



문영철

국방기자 칼럼

매년 4월 첫째주 금요일은 ‘예비군의 날’이다. 하지만 매년 청와대와 국방부가 주관하는 기념행사에 예비군은 조연일 뿐이다.

청와대는 5일 ‘모범 예비군’을 청와대 초청하는 행사를 연다. 하지만, 초청대상자 대다수는 예비군 훈련을 받고 유사시 투입되는 진짜 예비군이 아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청와대 초청인원은 40명, 이 중 예비군 신분은 고작 5명이다. 나머지는 군무원, 지휘관, 관련 업무 공무원, 명목상의 예비군인 여성 예비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장관 표창 수여대상자도 예비군의 비중은 현격하게 낮다. 올해 국방장관 표창수여자는 280여명 이 중 예비군은 고작 13명이다. 상비군 감축 등으로 숙련된 우수 예비군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예비군의 위상은 행사의 각두기 정도다.

모범 예비군 초청행사의 경우 본래 예비군 업무에 공헌한 예비군 지휘관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군의 청와대 초청과 국방장관 표창 수여는 너무나 인색하다.

더욱이 청와대는 행사 전날인 4일까지 초청 예비군의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명단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비군에 관심조차 없는 현실이다.

예비군 표창 및 모범 예비군 초청 대상자는 각군, 특히 예비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육군의 각 수임군

부대가 추천을 해,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향토사단 등에서 우수 예비군을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연간 15일 가량을 복무하는 비상근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한 간부 예비군은 “예비군으로 군에 공헌하고자 비상근을 지원을 했지만, 특별한 예우는 없다”면서 “대통령 초청이나 국방장관 표창이 비상근 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군 전체로 활성화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모범 예비군에 선정이 되고 표창을 받는지 알 길이 없다. 선정 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예비군의 중요성, 강화되는 훈련 규정, PX(군대 마트)가 사라진 동원훈련장 등 예비군에게 요구하는 것은 날로 늘고 있다. 그런데 예비군들의 위상강화는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나아진 것은 올해들어 예비군 보상비가 지난 해 대비 2배인 3만2000원으로 인상됐다는 점이다. 2배로 인상됐다 하더라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2박3일 간의 동원훈련은 야간훈련을 포함해 28시간의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예비군에게 정당한 현실적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것은 제 각기 산재된 예비군 관련 법령과, 인건비 상승에 인색한 국회의원, 말로만 중요하다며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동원분야 예산(국방비 전체의 0.3~0.5%) 축소 때문이다.

예비군의 날만큼은 전국 모든 예비군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비군은 정부의 호갱(호구 고객)이 아니다. /captinm@



아주자동차대학 박병완 총장(왼쪽)이 지난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특성화대학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아주자동차대학

### 아주자동차대

## 4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

아주자동차대학은 지난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특성화대학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아주자동차대학은 ‘4년 연속’ 수상은 물론 교육기관 유일의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도 함께 안았다.

만16세 이상 소비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성화대학 중 아주자동차대학이 인지도, 만족도, 충성도, 글로벌 경쟁력 등의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하여 1위로 선정됐다. /한홍수 기자

## 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 ‘인문학 위기’에 머리 맞댄다

인문사회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

‘공학박사 취업률은 87.3%, 인문학은 50.9%.’

최근 인문학 박사학위자 중 절반만 취업에 성공하는 등 인문학 위기에 대응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문체부가 힘을 모은다. 교수 신분이 아닌 대학 내 박사과정 연구자 등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문학 지원 방향도 기존 연구비 지원 중심에서 인문학의 사회적 수요를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년)’을 공동으로 수립해 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문사회과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문사회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은

부족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돼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해 대학 내 박사급 연구자에 대한 기존의 ‘박사 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가칭)’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기존에는 소속이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연구자도 지원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가 ‘신진 전임연구자’ → ‘중견 전임연구자’ → ‘우수 전임연구자’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내에 연구 거점인 인문사회연구소를 지속 확대, 우수 연구소는 최장 20년(6+7+7) 간 지원하는 등 연구자의 정착을 돕는다. /한홍수 기자



3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인권강연회 및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숙명여대학교

## 숙명여대 대학원생 인권 보호... ‘권리장전’ 선포

숙명여대학교는 지난 3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에서 ‘2019 인권강연회 및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숙명여대 인권센터 산하 인권상담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최근 수년에 걸쳐 여러 대학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인권침해 사례를 참고, 학내 대학원생 신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강정에 총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학에서 인권보장을 해야 할 대상은 대

학원생도 포함되며, 이번 권리장전 선포는 우리대학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를 명시하고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포식 이후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인권강연회도 진행됐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번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식은 대학원생 신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아진 대학 구성원들의 약속이 구체적인 문서로 만들어져 교내외로 선포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홍수 기자